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한 일 군 사 비 밀 정 보 보 호 협 정 이것만은 알자!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삽화 출처: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10.22



한 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G S O M I A) 이것만은 알자!

북핵 대응을 위해 일본 정보가 필요하다는데 정말 그러나요?
일본한테 우리 군사정보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연다는데 사실일까?
한일 위안부 야합, 사드(THAAD) 한국배치와 무슨 관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호 비준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꼭꼭히 따져보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익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포함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기본입장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 가운데 하나는 인간 공동체가 깊은 연대를 통해 인간의 모든 활동을 최대한 인간의 고유한 성격에 맞게 인간화 시키는 것입니다(《기쁨과 희망: 현대 세계 교회의 사목 헌장》).

이 인간의 길을 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공동선’과 ‘인간의 권리’입니다. 공동선은 인간이 보다 온전하고 충만하게 사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삶의 다양한 조건들을 말합니다(《어머니와 교사》, 69). 무엇보다 공동선은 인간의 권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여 증진시킬 때만이 가능합니다(《지상의 평화》, 60).

공동선은 곧 인간의 권리가 최적의 상태로 실현되는 것이며, 국가의 으뜸가는 책무도 인간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맞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들을 완수하는 것입니다(60). 그리고 국가의 권력은 당연히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어야 합니다(56).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는 군사정책은 명백히 시민들의 온전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시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핵무기 보유, 군비 경쟁은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온전한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쟁과 군비 경쟁을 통해 패권과 이익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세계 공동체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평화적인 국제 관계의 모습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 “정의의 작품”입니다(《기쁨과 희망》, 78). 평화는 정의를 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사랑의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평화는 사회의 균형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이 성장하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지상의 평화》, 80). 특별히 국제 관계와 세계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전망이 실현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동선에 헌신하는 정치,

인권의 보장과 증진, 국가 사이의 갈등을 비폭력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국제 구조의 구성입니다⁽¹³⁰⁻⁴⁵⁾.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 협정의 당사자들은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¹¹³⁾. 이런 원칙과 노력없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한다면, 가톨릭 교회가 이를 지지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처: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이 뭐예요?

!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맺는 협정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줄임)은 고조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한국이 일본과 2016년 11월 23일 체결하였다
- 제공받은 정보의 제3국 이전금지, 제공정보에 포함된 지식 재산권의 존중, 정보수령의 절차 등 보안원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일지소미아(GSOMIA)라 부르기도 한다.
- 한국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북한에 관한 인간정보를 포함해 지리적 정보·핵 및 미사일 정보, 한국의 작전계획 등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

**?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다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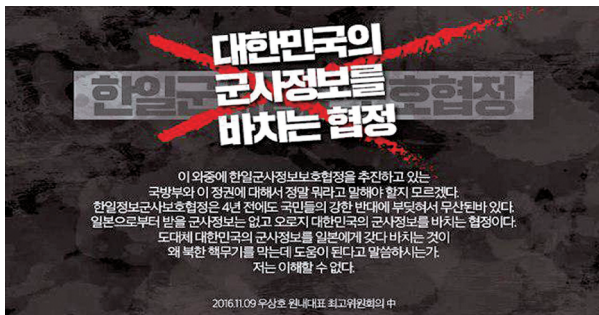
! 일본의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쓸모가 없다

- 한반도는 남북간 길이가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데 불과 2-5분이 걸리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이 설사 북한 미사일관련 정보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남한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
- 한국은 지리적 정보자산이나 인적 정보자산 등에서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비해서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떨어져있는데다 백두대간이 가로지르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발사 정보를 한국에 비해서 파악하기에 매우 불리하다.
- 2012년 4월 13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 때 한국은 세종대왕함이 발사후 54초만에 탐지했지만 일본은 1시간이 지난 뒤 겨우 발사사실을 확인했다. 2016년 8월 3일 북한 노동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을 때도 한국은 발사직후(오전7시53분경) 파악했지만 일본은 9시8분에야 발표했고 낙하지점도 특정하지 못했다.

?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 한국은 대북 방어에 충분할 정도로 독자적인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다

- 국방부는 “한국군은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17)고 밝혔다.
- 한국은 굳이 일본의 대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대북 인간정보 등 한국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국이 얻을 이익은 없다.



? 일본한테 북한 잠수함(탄도미사일 탑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 북한 잠수함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 한국해군은 대잠초계기(16기), 링스헬기(23대), 와일드캣(8대) 등 대잠수함전 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 북한 잠수함은 75척으로 수량으로는 남한(18척)보다 많지만 잠수정(500톤이하)이 54척(300톤이하)으로 주축이다. 또 장시간 항행이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연안방어용이다. 로미오급(1800톤)잠수함이 20여 척 있지만 1970년대 중국에서 수입한 구식으로 잠항시간이 몇 시간이 안되는 등 남한에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은 개발되더라도 최소사거리가 2500km 이상이어서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위협이 과장돼 있다.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디젤 잠수함으로서의 잠항시간의 절대적 한계,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한 잠수함 건조능력의 한계, 잠수함 운용능력 확보 문제,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건조 및 운영에 드는 막대한 재정 문제 등 여러 면에서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언제 전력화할 수 있을지 또 실전배치 하더라도 핵억지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

? 그러면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건가요?

! 한미일 통합엠디(MD)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지역에서 각각 지역 MD를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구적 MD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MD는, 북한 및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 북한 및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또 정확히 탐지하고 추적하는데서 한국이 갖는 지리적 이점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MD의 완벽성을 기하는데서 결정적일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운용하는(또 장래 도입하게 될) MD센서들의 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이나 괌, 하와이, 미국본토로 향하는 북한 및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탐지 및 식별, 추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요격기회를 늘리고 요격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미국 MD참여를 강요해 왔다.
- 2009년 7월 15일 열린 한·미·일 3자 안보대화에서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이 “정보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 배타적으로 이뤄져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

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미일통합 MD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것

- 한미일 삼각 MD 체계의 구축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MD 지휘체계의 연동 등을 통해 실현된다.
- 한국배치 사드 레이더는 일본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와 직접 연동되어 정보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MD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준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확보한 북한과 중국의 정보를 일본 MD 체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국제법적 구속력을 강제함으로써 한미일 삼각 MD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켜준다.
- 이렇게 되면 한국MD는 미국 및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며 한국은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략된다.

?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과 관계가 없다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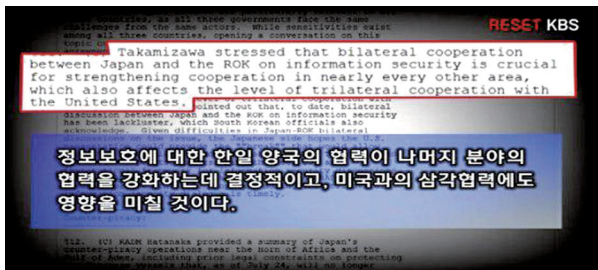
! 그렇지 않다.

-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한, 대북 정보공조를 목적으로 한 국가간 협정이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한국이 여타 나라들과 맺은 단순 군사교류나 교역목적의 협정과는다르다. 러시아와의 군사정보협정은 무기거래와 통상확대가 목적이고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정보협정은 원전수출이 목적이다.
- 군사협력은 보통 3단계로 구분된다. 공동의 적도 설정하지 않고 조약에도 의거하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군사교류 수준과 공동의 적을 설정하지만 조약에 의거하지 않는 준군사동맹 단계, 공동의 적도 설정하고 조약에 의거하는 동맹단계로 구분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표방하고 조약에 의거하는 것이어서 가장 높은 군사동맹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 군사동맹 관계로 변한다.

-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일관계를 전면적인 동맹관계로 이끌게 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다음 수순으로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약사) 체결이 기다리고 있다. 정보와 군수는 군사작전의 승리를 위한 양대 축이기 때문이다.
- 정보와 군수에서의 한일 군사협력은 또 군사작전의 협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공동작전계획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 군수, 작전 영역에서 한일군사협력의 제도화는 곧 한일동맹의 완성을 뜻한다.



? 한국의 대북정보가 일본에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결행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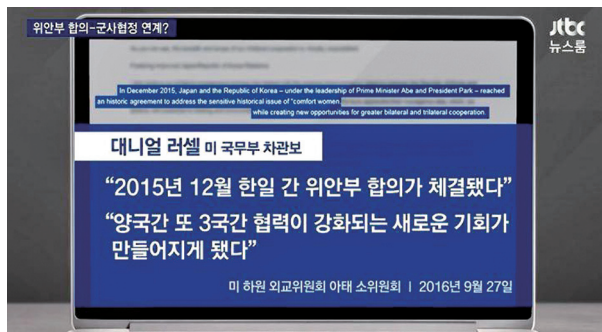
-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앉아서 당할 수 없으므로 북한 미사일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적기지공격론을 사실상 정책으로 삼고 있다. 북한 미사일기지를 선제공격하려면 북한의 지휘통제시설, 미사일기지, 북한의 방공시설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를 얻게 되면 일본은 선제공격을 결심하기가 쉽게 된다.
- 일본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이 살아남아서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북한미사일을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히 탐지할 수 있으므로 일본은 북한미사일요격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 또한 북한 공격결심을 쉽게 하는 요인이다.
- 일본의 적기지공격론은 그것이 결행되면 한반도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며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4항의 위배이고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도 위배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줘

-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고 그 보복으로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일본은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해 북한에 대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가령 일본은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 북한이 미국을 향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작전 등을 상정하고 있다.
-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에 대한 한국의 조기경보가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으로 실시간 전달되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요격 및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일본의 공격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을 믿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더욱 마음 놓고 결행할 수 있게 된다.
-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와 일본의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 대처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말하는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한나라에 대한 공격행위가 곧 타국에 대

한 공격으로 간주될 정도로 국가상호간 관계가 지리적으로나 기타 특수한 사
정으로 긴밀한 경우 공동방위의 필요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 아니라 미
국과의 동맹관계에 입각해 미국이 지역 또는 세계에서 행
하는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연다는데요?

! 그렇다

- 한국이 건네준 북한의 군사정보들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무력행사(적기지공격론)의 이행을 뒷받침해준다.
- 미일방위협력지침2015¹나 일본 안보법률²은 존립위기사태(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는 사태) 때 자위대의 미군지원작전 형태로 한반도 영역 및 인근에서 '미군장비의 방어', '실종미군'의 수색구조, '해상작전'(기뢰제거, 함정의 호위) 등을 상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나 안보법률 어디에도 제3국(한국)의 동의를 구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위의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는데 그 경우 침략에 해당된다. 자위대의 위 작전은 평시부터 한국한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될 것이므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자위대의 재침략을 촉진한다.

1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을 각 상황별로(평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일본 이외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을 때 등) 정해놓은 정부간 문서

2 일본정부가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 일본은 중요영향사태 때도 한반도에서 자국민 대피, 미군에 대한 전후방군수지원, 실종미군수색, 해양안보(선박검사), 피난민대응 등의 군사작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일방위협력지침2015를 보면 제3국(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만 되어 있지 사전동의를 구한다고 되어있지 않다.
- 일본의 중요영향사태법도 제3국(한국)의 사전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병돼서 위의 작전을 펼 수 있으며 그 경우 침략에 해당된다.
- 일본의 위 작전들 역시 한국한테 받은 정보에 의거하여 수행될 것이므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촉진한다.



? 중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는?

! 중국포위를 위한 한일군사동맹 수립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

- 아사히신문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중국에 대한 대항의 필요에서 미국에 의해서 추진된 것’(2012년11월 9일)이라고 보도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한국군을 중국 견제세력으로 키우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라는 것이다.
- 중국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자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평화발전 시대의 조류와 지역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2016년 11월 23일)
- 한일군사정보협정에는 지식재산권보호조항(제6조라함)이 있다. 이 지식재산권 조항은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블록 2A(이시스구축함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로 사정거리 2000km, 요격고도 1000km이상)를 미국이 한국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 요격미사일은 남한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또는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 또는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때문에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종속될 우려는 없나요?

! 충분히 있다.

- 한국은 특히 북한 잠수함에 관한 일본의 정보를 원하는데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감시 및 수집하는 북한 잠수함 정보를 일본에 건네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대잠수함 전력의 정보수집력이나 작전운용상태가 일본에 노출되어 정보의 대일 종속을 피하기 어렵다.
- 한국은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따라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 미사일에 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MD자산들(특히 센서들)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를 위한 센서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한국 MD가 미 일통합 MD의 하위체계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보는 물론 작전 차원에서도 대일 종속을 피하기 어렵다.
-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지식재산권 조항에 따라서 한국은 미일이 공동생산하는 F-35나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 블록2A를 도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무기체계 운영에서뿐만 아니라 부품교체나 수리 등 군수 측면에서도 대일 종속을 피하기 어렵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비준동의 대상 아닌가요?

! 맞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피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전횡

-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체결한 정보보호협정 중 국회 비준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하는 새로운 한일동맹관계의 수립, 북한 핵위협 대응이라는 목적성, 한일간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각종 군사정보)에 비추어 볼 때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된다.
- “전쟁발발 시 군사적 원조를 약정한 조약만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회비준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좁게 해석한다고 치더라도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정보전력이 평시 및 전시에 한국영역에 들어와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다른 여타 정보협정과 는 목적이나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 등 이다르기 때문에 그간 국회비준을 받지 않은 협정과 동일 시되어서는 안 된다.
- 결국 정부가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과 전횡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한 것이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시킬 방안은?

!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도리어 한국을 북한 및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한미 일 집단방위의 일원으로 편입시킬 뿐이다.
- 이 협정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여론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은 조약의 종료나 탈퇴를 조약 체결국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조약이든지 조약의 종료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유효 기간이 1년(2017년 11월까지)이고 그 후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협정의 종료를 바라면 90일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면 된다.
-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공식 폐기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도 있다. 그것은 일본의 대북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일본의 정보요청에 한국이 응해야 한다는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폐기의사를 선언하고 그 때부터 정식 협정
의 종료 전까지 일본의 정보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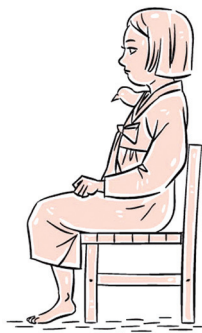
이 책을 만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자주와 평화통일, 비핵군축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사드 철회, 한일군사협정 무효화, MD와 군비확장 반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지원없이 순수히
3,500여명여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전화: 02-711-7292/누리집: www.spark946.org/E-mail :spark946@hanmail.net

이 책을 배포하는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
위원회**(이하 남장협 정평협)는 신앙과 정의에 봉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분노”(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 1항)를 향해서 마음과 삶을 개방하며 사회정의와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활동을 합니다.

E-mail: monkjustice@catholic.or.kr

진심어린 사죄가 먼저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자살입니다.
마음을 죽이고
바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을 죽입니다.
곧 사랑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쟁은
증오에서,
시기에서,
힘을 가지려는 의지에서,
자주 우리가 보듯이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안달에서 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의 2013년 그리스도성체성혈 대축일 강론에서—